여야, 21대 마지막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 난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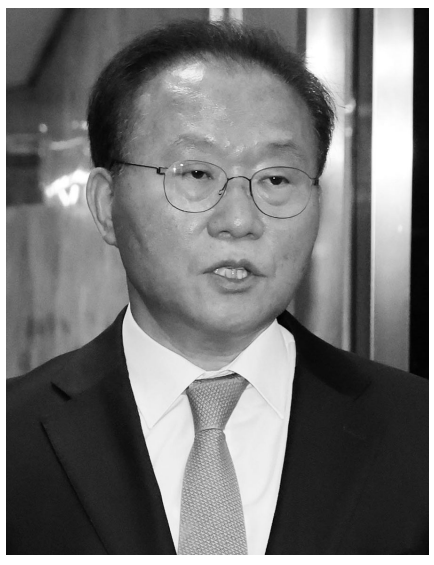
양당 원내대표 회동서 결과물 못내
민주, 채상병 특별법 등 처리 예고
국힘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주장

여야가 제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영수회담이 진행 중이던 2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에 나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했지만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 원내대표는 오찬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회동 관련 질문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이 만나고 나서 필요하면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영수회담 직후 다시 한번 약속을 잡을 계획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열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민생법안 합의된 걸 처리하면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정치적으로 쟁점이 많은 (법안을) 무리하게 임기 말에 문을 열어서 해야 하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찬 회동 전 기자들에게 "(국민의힘과) 계속 얘기할 것이다. 하는 데까지 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 개최를 공언하고 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말하면서 총선 민의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5월 임시국회 개회를 반대하는 것은 본회의 협상 지연을 위한 정치적 이유 때문인데 명분이 없다"고 5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어달라는 소집요구서를 김진표 의장에 제출한 상태다. 이 기간에 본회의를 두 차례(5월2일, 28일) 열어 채상병사건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과 밀린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은 폭거라는 등 비난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5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따른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회의 일정에 대해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데,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개의 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로 못 박혀 있다. 국회법을 좀 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광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15일간 회기 돌입

조례안 31건 등 45건 처리

광주시의회는 29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5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11개 조례로 흩어져 있는 5·18관련 조례를 통·폐합한 '광주시 5·18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 조례안'을 수정·의결했으며,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진행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광주시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조례안 31건, 동의안 4건, 규칙안 1건, 계획안 2건, 예산안 4건, 보고안 3건 등 총 45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상임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 '광주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등 5건 △행정자치위원회 '광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 △환경복지위원회 '광주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5건 △산업건설위원회 '광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교육문화위원회 '광주시교육청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 조례안' 등 12건이다.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1회 광주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계획안을 심사한다.

또 '2023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 및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도 처리한다.

정무창 의장은 "이번 회기에는 광주시와 시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개정 등 4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소관 상임위별로 꼼꼼하게 심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은지 기자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시의회 "경력통해 경영 전문성 검증"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노희용(62·사진)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별위는 29일 노 후보자에 대해 "동구청장 등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재단이라는 하나의 조직을 이끌어가는데 경영 전문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위원들은 노 후보자에 대해 "광주시 문화수도정책관·문화관광정책실장 등을 역임해 문화재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고, 동구청장과 기업체 대표로 일해 문화재단의 대표직을 수행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통과 경청을 기반으로 한 리더십 철학을 바탕으로 공무원, 구청장 등의 근무 경력을 통해 쌓아온 가치관과 공직관은 대표이사 직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관료체계내 행정조직 부서나 문화재단과 같은 기관을 관리감독했을뿐 실질적인 세부사업에 대한 집행경험은 미흡하고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정치인인 노 후보자가 임기 중 지방선거 등에 출마할 수도 있어 조직 안정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 후보자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경과보고서에 담긴 의견을 토대로 임명하면 2년 임기의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한다.

김은지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인터넷 전남일보 www.jnilbo.com
모바일 전남일보 m.jnilbo.com

이재명 "'법맥경화', 22대 국회선 재발 안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처리가 막히는 상황을 '법맥경화'라고 표하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재발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후반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상황을 가리킨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법사위에서 자구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이 문제가 이번 22대 국회에선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자구심사를 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키핑'하면서 소국회처럼 행동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맥경화, 더 이상 문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치적 해법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유류분 제도(상속자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법맥경화'의 한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국회 차원의 빠른 입법이 뒤따라야 하지만 관련 내용이 담긴 구하라법은 법사위에 가로막혀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1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았다. 구하라법을 비롯해 민생 관련 필수법에 최대한 속도를 낼 것"이라며 "여당도 협조하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선욱 기자

조국 "'한동훈 특검법' 처리 민주와 협의"

"총선 시기 공약 당연히 지킬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9일 22대 국회 '한동훈 특검법' 처리와 관련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동훈 특검법 발의 계획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 "법안은 이미 사실 준비돼 있다"며 "총선 시기에 공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신중론에 대해선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체급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별로 관심이 없다"며 "그런 것을 정치공학적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전 비대위원장이 자신이 검사장 시절에 내세웠던, 즉 윤석열 검찰총장을 모시고 내세웠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그대로 본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이에 대해서 체급이 헤비급인지 페더급인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한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탄생의 기획자이자 지난 2년간 윤 정권의 황태자였다"며 "살아있는 권력 중 살아있는 권력이었다. 지금은 일정하게 소외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사람에게 법이 적용되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잡을 가능성에 대해선 "한동훈 특검법을 통해 (한 전 비대위원장이) 수사를 더 철저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살아있는 권력이 다시 복귀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힘줘 말했다.

원내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해선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추진할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와 지난 25일 가진 비공개 만찬에선 원내교섭단체와 관련한 대화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실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먼저 민주당에 요구하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민주당이 먼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뉴시스

민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정치적 퇴행" 비판

국회서 상위법 법률 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을 향해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 "시대착오적 발생"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며 "학생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 원인이라고 강변하는데 그야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며 "교권 문제는 공교육 붕괴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학생의 인권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관련 입법 보완을 약속하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학교 현장을, 특히 학생의 인권을 제물로 삼아선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인권을 보호한다고 교권을 후퇴시키는 게 아니고 학생 인권을 억압해야 교권이 보호받는 게 아니다"라며 "갈라치기로 교내 인권 문화를 짓밟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 최고위원은 "지난 12년 동안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현장에서 인권문화를 싹틔우는 데 기여했다"면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에 의해 인권조례는 폐지됐지만 그보다 상위법인 법률로 제정해 학생과 교유원 인권 몸두 함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